

2007. 2. 7(水)

# 檢 討 報 告 書

【제157회 임시회】

達城郡 議會  
專門委員 全鍾律

대구광역시 달성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검토 과정

- 발의 일자 : 2007. 2. 2
- 발 의 자 : 이석원의원 외 7인

### 2. 제정 이유

-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 노인세대(차상위계층)와

모자, 부자,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3.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 노령, 결손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 저소득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 주요 내용은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기준 월 10,000원 미만 세대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모자, 부자, 조손가정 세대로 함.(안 제3조)
- 대상자 선정은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하면 군수가 지원대상자를 결정함.(안 제5조)
-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함.(안 제7조)

####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생활이 어려운 노인세대와 모자, 부자, 조손가정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복지책과 결손가정에 대한 자립심을 심어줄 것으로 여겨지며, 전국의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군에서도 시행하게 되면 노인층과

불우계층으로 하여금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본 조례안의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방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며

- 시행시기는 지원예산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야  
함으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함이 타당할 것임.

##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검토 과정

- 제출 일자 : 2007. 2. 1
- 제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담당관)

### 2. 개정 이유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 강화를 위해 조직을 우리군 특성에 맞게 새롭게 개편하고자 함.

### 3.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과 2007년 지방 총액인건비제 시행 계획을 근거로 함.
- 주요 내용은
  - 본청 기구개편
    - 국 명칭변경
      - 사회산업국 ⇒ 주민생활지원국(안 제3조)

- 과 신설(증 3)
  - 주민생활지원과, 청소위생과, 건축과  
(안 제6조 및 제7조)
- 과 이관
  - 농축산과 : 사회산업국 ⇒ 농업기술센터  
(안 제12조 제3항)
- 과 명칭변경 (안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 경제투자지원과 ⇒ 과학기술지원담당관
  - 총 무 과 ⇒ 행정지원과
  - 허가민원과 ⇒ 종합민원과
  - 민원지적과 ⇒ 토지정보과
  - 복지위생과 ⇒ 사회복지과
  - 도로교통과 ⇒ 교통행정과
  - 도시건축과 ⇒ 도시시설과
- 보건소 기구개편
  - 과 신설 : 보건과 (안 제8조 제2항)
- 농업기술센터 기구개편
  - 과 조정 : 1담당관 ⇒ 2과 (안 제12조 제3항)
    - 농축산과 (사회산업국에서 이관)
    - 기술담당관 ⇒ 기술지원과
-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폐지

##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군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지침(2006. 9. 19)에 의하여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사항임.
- 또한, 2007년 지방총액 인건비제 시행계획과 병행하여 군 기구를 개편한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직제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의 연계성과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광역시 안의 군(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용진군)에는 독립되어 있는 농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둔 점과

대구광역시 구청과 버스노선이 활성화되지 않고 우리군의 광활한 면적, 농업인구 분포의 고령화 등 도시화된 읍면과 원격지 읍면과의 차별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도농 복합형태의 우리군 실정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다고 여겨지며

- 비슬산 자연휴양림에는 사계절 전국의 많은 관광객과  
행락객이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으나, 비슬산자연공원  
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 공원녹지과내에 흡수하는  
점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시·군·구 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 및 실·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4와 같다.

- ②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여 실·국 또는 실·과·담당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구는 그 설치기준의 범위안에서 실·국 또는 실·과·담당관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③ <생략>
- ④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⑤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별표 4]

##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제10조제1항관련)

구 분		실·국	실·과·담당관
시	계룡시		9개 이내
	인구 10만 미만		15개 이내
	인구 10만 미만(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2개 이내	17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2개 이내	17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3개 이내	18개 이내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4개 이내	21개 이내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5개 이내	23개 이내
	인구 50만이상(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	6개 이내	26개 이내
	인구 50만이상 70만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내	20개 이내
	인구 70만이상 90만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내	23개 이내
	인구 9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6개 이내	26개 이내
군	용진군·울릉군		8개 이내
	중평군		9개 이내
	인구 3만 미만		9개 이내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		10개 이내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12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4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16개 이내
	인구 15만이상(광역시 관할구역안의 군)	3개 이내	16개 이내
구	특별시의 자 치 구	인구 50만 미만	5개 이내 22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	5개 이내 23개 이내
	광역시의 자 치 구	10만 미만	14개 이내
		10만이상 15만미만	3개 이내 14개 이내
		15만이상 50만미만	3개 이내 15개 이내
		50만이상	4개 이내 18개 이내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기준(제10조제1항관련)

구 분	과·담당관
· 인구 30만 미만	7개 이내
· 인구 30만 이상	8개 이내

3.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0조의2관련)

구 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면동장	부읍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 과장급 실장 중 시·군·자치구(국이 없는 시·군·자치구에 한한다)의 기획·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인 읍·동(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출장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 동을 제외)의 경우에는 읍·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부읍면장은 총무업무 또는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인구 3만 이상 읍이 과를 두는 경우에는 총무업무 또는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겸한다

## 2007년도 총액인건비

( 단위 : 명, 천원 )

구 분	계	공무원		기타직보수 인건비	일용인부임		물건비
		인건비	인력		인건비	인력	
합 계	661,020,156	460,558,162	9,564	18,017,247	70,905,220	1,804	32,702,267
대구시	290,354,377	173,733,610	3,326	14,845,073	6,079,560	290	16,858,874
구군소계	370,665,779	286,824,552	6,238	3,172,174	64,825,660	1,514	15,843,393
중구	36,476,023	28,543,995	615	135,054	6,155,435	143	1,641,539
동구	51,974,772	38,534,508	844	311,400	10,978,908	219	2,149,956
서구	43,373,135	33,923,523	709	360,539	7,181,280	180	1,907,793
남구	37,910,088	28,818,426	611	105,472	7,344,918	153	1,641,272
북구	53,082,783	40,943,254	922	912,412	8,989,827	231	2,237,290
수성구	51,899,051	38,966,630	881	317,130	10,453,572	228	2,161,719
달서구	56,868,974	43,641,828	972	642,453	10,173,625	245	2,411,068
달성군	39,080,953	33,452,388	684	387,714	3,548,095	115	1,692,756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검토 과정

- 제출 일자 : 2007. 2. 1
- 제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담당관)

### 2. 개정 이유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군 조직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새롭게 정비하고, 이에 따른 부족인력 일부를 증원하여 대민 봉사행정을 구현코자 함.

### 3.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과 2007년 지방 총액인건비제 시행 계획을 근거로 함.
- 주요 내용은
  - 총 정원을 665명에서 684명으로 19명을 증원함 (안제2호)
  - 집행기관 : 672명(종전 654명 : 증 18)

- 일반직 16명 (5급 3, 6급 6, 7급 5, 8급 3, 9급  $\Delta 1$ )
- 기능직 2명 (6급 1, 9급 1)
- 의회 : 12명(종전 11명 : 증 1)
  - 일반직 2명 (7급 1, 8급 1)
  - 기능직  $\Delta 1$ 명 (10급  $\Delta 1$ )
- 정물관리기관별 · 직급별 정원을 별표와 같이 함 (안제3조)
  - 본청 : 362명  $\Rightarrow$  394명 (증 32)
    - 일반직 : 증 28 (5급+2, 6급+14, 7급+3, 8급+4, 9급+5)
    - 기능직 : 증 4 (6급+1, 8급+1, 9급+2)
  - 의회사무과 : 11명  $\Rightarrow$  12명 (증 1)
    - 일반직 : 증 2 (7급+1, 8급+1)
    - 기능직 : 감 1 (10급  $\Delta 1$ )
  - 직속기관 : 88명  $\Rightarrow$  102명 (증 14)
    - 일반직 : 증 13 (5급+2, 6급+3, 7급+5, 8급+2, 9급+1)
    - 기능직 : 증 1 (10급+1)
  - 사업소 : 8명  $\Rightarrow$  0명 (감 8)
    - 일반직 : 감 5 (5급  $\Delta 1$ , 6급  $\Delta 2$ , 7급  $\Delta 1$ , 9급  $\Delta 1$ )
    - 기능직 : 감 3 (8급  $\Delta 1$ , 9급  $\Delta 1$ , 10급  $\Delta 1$ )
  - 읍 : 91명  $\Rightarrow$  80명 (감 11)
    - 일반직 : 감 11(6급  $\Delta 3$ , 7급  $\Delta 2$ , 9급  $\Delta 6$ )

- 면 : 105명  $\Rightarrow$  96명 (감 9)
  - 일반직 : 감 9(6급  $\Delta$ 6, 8급  $\Delta$ 3)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달성군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 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 동 조례와 병행하여 시행됨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원의 증원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검토 과정

- 제출 일자 : 2007. 2. 1
-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담당관)

### 2. 개정 이유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군 조직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새롭게 정비하고, 이에 따른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을 현실성있게 정비코자 함.

### 3.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 조직개편시 시행하는 것으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되면 수반되어야 할 사항임.
- 주요 내용은
  - 쓰레기 봉투 관련업무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
    - 쓰레기 봉투 판매 및 판매업소 지정, 취소관련 권한위임 삭제

-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읍면장에게 위임된 건축신고 대상물) 권한위임 삭제
- 건축업무 본청으로 이관
  - 건축관련 권한위임 삭제
- 불법 농지전용등의 조사 및 농지전용 신고업무 본청으로 이관
  - 농지법중 권한위임 삭제

####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던 사항을 본청으로 이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여겨지나
- 건축업무, 농지업무, 쓰레기 봉투 판매업무등 주민과 밀접한 사항이 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주민불편이 다소 따를 수 있다고 판단됨.

##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검토 과정

- 제출 일자 : 2007. 2. 1
- 제 출 자 : 달성군수(행정관리국장)

### 2. 개정 이유

- 다사읍 「다사 주공아파트」의 입주로 인한 각종 행정추진 및 주민서비스 제공의 한계로 주민불편과 행정누수가 예상됨에 따라, 행정리 신설과

달성2차 산업단지내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하여 행정리간의 경계를 조정코자함.

### 3.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2006. 12.20 - 2007. 1. 9)를 거친 사항임.
- 주요 내용은
  - 다사읍 매곡1리에 입주한 다사주공아파트(608세대)에 대하여 매곡1리에서 분리하여 매곡9리를 신설하고,

- 주거단지내에 있는 구지면 창 1.2리는 응암2리로 변경하고, 산업단지 내에는 남북간 중앙도로를 경계로 동편의 응암2리, 유산리, 내 1리를 예현리로 조정하고, 서편의 응암2리, 예현리, 유산리는 내 1리로 조정 변경함.

####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아파트 입주로 인한 행정리 신설과 행정리간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 주민 행정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검토 과정

- 제출 일자 : 2007. 2. 1
- 제 출 자 : 달성군수(행정관리국장)

### 2. 개정 이유

- 다사읍 매곡1리 「다사 주공아파트」의 608가구가  
입주를 완료함에 따라, 행정리 분리와 함께  
행정반의 신설로 주민생활의 편리를 도모코자 함.

### 3.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 리장정수 조례와 함께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임.
- 주요 내용은
  - 신설되는 다사읍 매곡9리 25개 반을 신설함.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아파트 입주로 인한 행정리 신설에  
따라 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검토 과정

- 제출 일자 : 2007. 2. 1
- 제 출 자 : 달성군수(건설도시국장)

### 2. 제정 이유

- '05. 1. 27 전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설해 예방을 위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대설시 주민 스스로 자기집, 자기상가 앞 도로의 눈을 치우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함양토록 계도하여 겨울철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임.

### 3.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임.

## ○ 주요 내용은

-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소유자 거주시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하며 소유자 비거주시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함.(안 제4조)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 책임범위는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에서 1.5m 까지,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에서 1.5m 까지로 함.(안 제5조)
-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 작업을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 단, 야간 적설시에는 다음날 오전 11시 까지 완료토록 규정(안 제6조)

##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서울특별시에서는 2006년 7월에 제정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중구, 청주시, 광주시 등에서도 제정 또는 추진중에 있으며
- 대구광역시에서는 수성구를 제외한 구청에서 제정 또는 추진중에 있으며, 수성구에서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염화칼슘등 무리한 자재를 요청함에 따라 구예산의 부담이 우려되어 의회상정을 유보한 상태임.
- 또한, 건축물 관리자에게 제설, 제빙 작업도구를 비치하고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벌칙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 성숙한 군민의식 함양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이웃 주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①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타도시 및 타구 제설·제빙 조례제정 추진현황

2007. 1. 10현재

구 분	추진 현황	주요 내용	비 고
서울시	제정 - '06.7.19	· 인 도 - 전폭 · 이면도로 - 1.0m	
부산시(중구)	제정 - '05.11.25	· 인 도 - 전폭 · 이면도로 - 중앙선	
청주시	입법예고 완료	· 인 도 - 전폭 · 이면도로 - 1.0m	
광주시	조례 공포전	· 인 도 - 전폭 · 이면도로 - 1.5m	
중 구	제 정 - '05.11.30	· 인 도 - 전폭 · 이면도로 - 중앙선	
동 구	입법예고 완료	· 인 도 - 1.5m · 이면도로 - 1.5m	
서 구	의회상정 (본회의 가결)	· 인 도 - 전폭 · 이면도로 - 1.0m	
남 구	의회상정 (상임위 심의중)	· 인 도 - 전폭 · 이면도로 - 1.0m	
북 구	입법예고 완료	· 인 도 - 전폭 · 이면도로 - 1.0m	
달서구	의회상정 (상임위 가결)	· 인 도 - 전폭 · 이면도로 - 1.5m	
수성구	의회상정→유보	· 인 도 - 1.5m · 이면도로 - 1.5m	(유보사유) 주민들에게 큰 부담 및 자재요청에 따른 예산부담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완료 ⇒ 2007. 1. 18	· 인 도 - 1.5m · 이면도로 - 1.5m	

##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검 토 보 고

### 1. 검토 과정

- 제출 일자 : 2007. 2. 1
- 제출 자 : 달성군수(사회산업국장)

### 2. 제안 이유

-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양대노총의 사무실 사용 요구문제로 2005년도 의회 임시회에서 승인 유보되었으나, 이후 제반여건의 성숙 등 향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의 승인을 득하여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 3. 검토 의견

- 주요 내용은
  -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
    - 달성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 민간위탁동의안 승인 후 수탁자 공개 모집(2007년 2월중)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의결(2007년 2월중)

- 심의회 구성 : 7명
  - 위원장 : 부군수
  - 위 원 : 사회산업국장(당연직)
  - 군의원 2명(의장이 추천)
  - 기타 3명(별도 선정)

- 민간위탁 운영(2007년 3월중)

○ 검토 결과

- 본 동의안은 2005년 139회 임시회에서  
근로자복지관 건물일부를 민주노총 군협의회에서  
사무실로 사용코자 요구함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보한 안전으로
- 현재는 한국노총 달성지부와 달성노동상담소  
사무실로 사용하고 민노총에서 이의가 없으므로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자를 공개모집토록  
동의안에 대한 승인은 적정하다고 판단됨.